

한국전쟁기 학살에 관한 집단적 기억과 남한에서의 진상규명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dckim@mail.skhu.ac.kr

1. 한국전쟁의 학살

한국전쟁은 20세기의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던 전쟁이다. 전쟁기간 중 남북한 전역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최소한 20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총격, 기총사격, 무차별 폭격이 자행된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의 소중한 유산을 무너뜨려버린 선혈이 낭자했던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서의 인명 손실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수백만의 가족이 전쟁 중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1,000,000 이상의 중국 병사들이 사망했으며 약 37,000명의 미군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잃은 북한은 최악의 손실로 고통 받았다.

아마도 한국전쟁에서의 학살은 서양인들 뿐만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중 대부분이 AP와 BBC에서 보도되었던 노근리 학살을 제외하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P보도에 반응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각각 독자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사살하도록 한 명령과 고의적인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고의적으로 부정하였던 반면, 일부 미국 퇴역 군인들과 한국 생존자들은 모두 그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모두 그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노근리 사건이 단지 병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은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상식일 것이다. 100건 이상의 미군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수백 건의 남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처형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오랫동안 나이지 못한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남한 당국은 그 사실을 북한 공산군과의 교전을 핑계로 암묵적으로 정당화 했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차단했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희생자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감히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그 문체와 집단학살에 대한 기억을 다시 다루지 못했다.

우리는 현재의 학문적 조사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한국전쟁기에(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발생했던 집단학살을 세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군사 작전의 과정에서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경우이다. 미군은 전투행위의 일부분으로서 한국 민간인들에게 사격, 포격, 및 폭격을 가했다. 한국군 역시 북한군에 동조했다고 의심되던 수십만의 마을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한국 정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 혐의자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한 한국군의 약식 처형이다. 북한군 역시 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포로들과 우익인사들을 죽였다. 세 번째 형태는 주로 청년 단체들과 민간인 스스로에 의해 자행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보복을 포함한다. 종종 점령군 허가 하에서 준 군사적 청년집단에 의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마을 내에서 죽임을 당한 경우, 희생자 집단은 가해자들이 궁극적으로 후퇴했을 경우 원수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죽임으로써 복수하려 했다. 이 종류의 마을 차원의 상호 보복은 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생했다.

비록 한국전쟁의 인명 손실이 측정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냉전과 민족분단은 지난 60여년 동안 그것이 남한에서 문체되기 되는 것을 막아왔다. 국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이 쟁점은 두 한국정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국전쟁기의 집단학살에 대한 폐쇄된 기억과 역사적 증언들을 되살려 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

가 될 것이다.

2. 반공주의 치하: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1953년 이후 남한의 반공주의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한국전쟁기의 집단학살에 대해 집단적 기억상실을 강요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남한의 공식적인 이름이자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한 바로 그 날짜를 의미하는 특징을 갖는 6.25는 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쟁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공개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현재의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들은 한국전쟁기에 남한 병력에 의해 행해진 대량 학살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을 꺼려한다. 그들은 결코 진실을 듣고 조사하기를 원하는 희생자들의 반복적인 탄원에 어떤 반응이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남한 언론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AP의 보도를 단지 인용했을 뿐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 사건이 전투상황 사이의 비전투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미군에 의한 대량 학살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한 미국의 노근리 보고서가 발표된 후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에 만연해 있는 그 침묵은 단순한 기억의 결여가 아닌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하도록 소름 끼치는 목살일지도(Edwards 1986, 11) 모른다.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과,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바꾸는 것은 학계와 기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반공주의에 의해 강요된 기억상실 하에서 생존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감히 그들이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럼으로써 희생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이상이었다. 남한 정부가 그때 이후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은 아버지와 남편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직접적인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전쟁 전과 이후의 집단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과, 정부를 배신했다고 기소되고 대부분 사망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가족을 잃고 혼자 생존한 사람들은 ‘오늘까지 사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절규한다. 반세기가 지났을 때조차도 이 생존자들은 아직까지 인류가 인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동을 목격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개나 돼지처럼 취급 받았던 끔찍한 기억들을 갖고 살고 있으며 그 집단학살에 대해 ‘잔인무도하고,’ ‘전 세계의 역사에서 잔혹함에 있어 가장 끔찍한 행동이며,’ ‘20세기 후반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한다.

희생자 가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누가, 왜 그들을 죽였는가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침묵을 지켜왔다. 이는 집단학살이 더욱 잔혹할수록, 폭력을 행한 자들의 행동이 정치 세력에 의해 더욱 신격화 되어갈수록, 집단 학살의 희생자들은 더욱 육체적, 정서적으로 절망적이 되기 때문이다. 힘든 반공주의 정권하에서 평생 혐오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온 소수의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통로도 갖지 못했다. 아군 병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체험은 국가가 퍼뜨린 공식적인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그 기억은 따로 떼어 내어져 그들의 가슴속 깊이 묻혔다. 패자들의 기억은 반공주의의 정신적인 공포 하에 잊혀지도록 강요되었다.

피해자들은 남한 정부에 의해 3번 살해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및 그 이전에(1948-1953) 발생한 대량 학살이 첫 번째이고, 가족들의 사망과 실종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대중들을 억눌렀던 1961년의 군사 쿠데타가 두 번째이며,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을 ‘빨갱이’라 명명하고 1980년에 이르기까지 연좌제 체제 하에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세 번째이다. 일반적으로 학살의 최종단계라고 한다면 학살에 대한 부정인데, 남한 희생자들은 명백한 부정보다 연좌제라는 학살보다 끔찍한 단계를 경험했다. 비록 연좌제라는 제도가 전통주의적인 유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배제하고 근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생존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연좌제 제도는 사실상 간접적인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록 남한 경상북도 문경지역 민간인들이 1949년 12월에 군대에 의해 학살 당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족보에

는 그들이 공산군 게릴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쓰여있다. 게다가 경상남도 거창에서 군대에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족보에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공주의의 사회적 통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행위는 탄압받았다. 그러므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1948년의 4.3사건 후 제주도 거주민들 역시 '빨갱이'로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인 선거에서 지배세력인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조차 해야 했으며, 아이들은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일부 생존자들, 혹은 희생자 가족들은 심지어는 그들 자녀에게 학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조차 없었다. 그들의 고통은 고문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정부에 의해 감시 당하고 차별을 받을 정도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기에 대량 학살이 한국에서 반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3. 군사정권의 붕괴 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

한국전 학살의 유가족들이 억압된 슬픔을 공식석상에서 드러낸 것은 군사정권의 붕괴(1987) 이후였다. 거창 사건과 제주 4.3사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군사 독재의 붕괴 직후 시작된 전형적인 경우였다.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일련의 학살 중 단지 한 사건에 불과했던 거창 사건은 발생 직후 전 세계에 알려진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순수한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남한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1948년 제주 4.3사건 또한 희생자의 규모 및 제주도의 동시대의 정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지역의 집단적 정체성이 포함된 제주도 민중의 슬픔은 소설과 시의 주제로 나타나곤 했다.

거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은 유가족들이 주도했는데 반해 제주 4.3의 경우는 제주의 학자들, 운동가들, 그리고 지역 매체들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 되었다. 민주화에 의해 조성된 정치적, 이념적 환경의 변화와 사건과 관계 없는 학자들의 적극적인 탄원은 살아남은 가족들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학자들과 기자들은 4.3 사건 희생자들 대부분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극우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영삼과 김대중의 문민정부는 결국 이 두 미결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6년에 통과된 거창 특별법은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주 법안(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좌익 범죄자로 오랫동안 낙인 찍혔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진실을 발견하는, 혹은 명예를 회복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두 특별한 위원회는 매우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왔다. 거창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기념물 건축은 거의 완료되었다. 이제 희생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4.3 위원회 역시 조사를 끝마치고 화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주 4.3 위원회가 누가 거주민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제주 학살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반란 세력 진압 작전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14,373건의 제출된 사례 중 86%에 달하는 학살이 국방경비대와 경찰, 우익 단체에 의해 자행됐다고 결론지은 반면, 미군의 역할 부분은 확증하지 못했다. 현 대통령인 노무현은 공식적으로 이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의 예전 이름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그 사건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런 한계를 갖는 제주 4.3 사건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의 존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은 한국전쟁기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발걸음을 떼어놓았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AP에 노근리 사건과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들이 발표된 것은 미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빌 클린턴의 '유감'은 많은 남한 사람들이 요구했던 공식적인 사과는 아니었다. 미군은 희

생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1,000,000를 지급하고 \$75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희생자들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 워싱턴에 관한 한은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의 조사나 더 이상의 보상은 없었다.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들은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의 보고서나 성명이 한국 희생자들에게는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은 휴전협정 이후 미군 관련 학살에 대한 첫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많은 생존자 가족들은 그 후 제주 4.3 위원회와 노근리 사건을 지켜본 후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줄 것을 한국 국회에 탄원했다.

4. 전국적인 과거청산운동과 몇 가지 장애물

1) 운동 과정과 입법

늘어나는 한국전쟁기 학살에 대한 승인은 거창, 제주, 노근리와 같이 일부 고립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적인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반세기라는 시간이 지난 한국에서 2000년도에 시작되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숫자는 이미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 사이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긴박함 역시 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것은 일종의 한국전쟁에 관해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2000년 9월 7일에 비정부기구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국회에 한국전쟁기 학살을 규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입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단체는 그 후 생존자 가족들을 움직였고, 그 법이 비통에 빠진 사람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도록 정치인들이 그 법을 제정하도록 탄원했으며, 한국전쟁의 잊혀진 기억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전단을 뿌렸다. 이 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한국전쟁피해학살전국유족회’ 역시 나타났다. 비록 희생자 가족 대부분이 탄압이 있을 수 있기에 침묵을 지켰고 모습을 드러내길 거부했지만, 일부 용기를 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4년 16대 국회에 의제로 상정됐지만 불행히도 큰 득표수 차이로 거부당했다. 예견된 대로 16대 국회의 다수당이었던 보수적인 한나라당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2005년의 총선 결과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남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진보적인 노무현대통령과함께국회들이끄는데성공했다. 200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은종합적인과거청산의필요성에대해언급했고, 이는 운동가들과 한국전 학살 생존자 가족들이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도록 촉진했다. 학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사회에는 일제식민지배 하에서 친일 행위에 대한 조사부터 군정기의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있었다. 이 모든 쟁점들은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논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성명에 힘입어 몇몇 관련 단체 대표들이 모여 2004년 9월에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을 서약했다. 그들은 이후 법률 제정자들에게 대한민국 출범 이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는 결국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을 입안했고 다수당인 우리당과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공조했다. 주요 반대파였던 한나라당은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의 흐름이 보수세력의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며 맹비난했다. 해당 법 초안의 주요 내용인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반하여, 그들은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술기관이 과거를 다루는데 있어서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운동가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정부 조직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술적 조사와 다르다며 그 대안을 비판했다. 그들은 만약 정부 기관이나 그 요원들이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만약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면, 만약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

로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과거를 다룬다는 이름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 법률 제정을 방해하는 행동임은 분명해 보였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연구기관을 제안함으로써 입법에 반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관련된 다른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크게 수정된 상태에서 그 법안을 수용했다. 2005년 5월 3일, 심각하게 왜곡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안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 12월 출범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과 사상자,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독립적 정부 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위원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한국전쟁기의 불법적인 민간인 대량 희생이 주요 조사 영역에 포함되었다.

한국전쟁 중의 학살이 1953년의 정전 이후 최초로 정부 기구에 의해 종합적으로 조사되게 되었다.

2) 역사적 진실규명 운동 과정의 장애물

A. 극우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

아마도 과거사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정치 권력의 판도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정치적인 기획일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 있던 일부 국가의 경우를 되돌아 보았을 경우 역시 그 시도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중국에는 실패로 끝나기조차 했다. 오래된 권력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강력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귀속된 권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쉽게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반공주의 질서라는 성체는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 군대, 그리고 다른 우익 단체들이었지만, 이제는 주요 반대파 정당(한나라당), 일부 검찰들, 그리고 ‘빅3’(조선, 동아, 중앙)가 소위 대한민국의 합법성이라 말하는 헌정 질서의 대변자,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공식적인 한국전쟁사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증언과 주장들을 무시했다. 예를 들면, 한국 극우의 최전방에 있는 조선일보는 종종 한국전쟁에 대해 공인된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갖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한국전쟁에 대해 역사적으로 특징지어진 것들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법의 입법에 반대하여 그들은 남한의 오랜 반공, 국가 테러주의, 독재주의, 친미주의 정권하에서 이득을 본 이들의 위기론을 내세웠다. 보수적인 ‘빅3’는 과거사 청산 계획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낭비적이며, 쓸모 없고, 퇴행적이며, 불화를 일으키고, 오늘날에 성취된 반공주의 및 경제적 성공과 주요 반대 정당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정치적으로 의도된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들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가 묻힌 과거를 파내는 일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무관심한 대중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이 논리에 따라 그들은 모든 역사적 진실규명 운동을 고립시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탄압하고자 했다.

전문가들이 ‘시민 운동의 폭발’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진보라 부르는 1990년대 남한내의 시민사회의 성장은 이런 논쟁을 제기하기에 좋은 조건을 형성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을 그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려는 좌익들의 정치적 음모라고 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1961년 5.16 군사 정권이 전국피학살유족회의 지도부를 체포하고 그것을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좌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당화 했던 과거를 상기시킨다. 그들에게는 존엄을 회복하고 슬픔을 해결해달라고 울부짖는 무고한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조차 정치와 이념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보여졌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반응은 역으로 역사적 진실 규명이 그들의 정치 생명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미군과 남한 병력 같은 아군에 의한 대량학살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만일 한국전쟁기의 일부 죽음이 남한 군대와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남한 헌법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또한 위협받을 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미국의 뻔히 보이는 왜곡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무부의 소극성은 이런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찰이나 국방부와 같은 모든 남한의 정부 기관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해본 적이 없다. ‘빅3’는 그런 사건들을 노근리에 대한 AP의 보도를 인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도해본 적이 없다.

이곳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받을 두고 있는 곳이다.

B. 한국전쟁의 숨겨진 양상에 대한 대중의 지식의 결여

한국전쟁 학살의 해결에 이르기 위한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데 있어 장애물 중 하나는 남한 현대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지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식적인 역사, 즉 한국전쟁은 북한 공산당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발발했고 그들이 그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극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종전 이후의 체계적인 대중 교육에 의해 널리 퍼져있다. 경찰과 야군 병력에 의한 국가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노인들은 결코 진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기억은 오늘날까지 철저히 억압되어왔다. 일부 남·북한 모두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직접 목격했던 나이든 한국인들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그런 대량 학살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 사들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기에 남한 군대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여전히 위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대량 학살들이 일가 친척들이 밀집 거주하는 시골 지역사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함께 거주했던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망 원인에 대해 침묵했다.

다른 국가들에서 그러했듯이 대량 학살과 관련이 있는 일부 퇴역군인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을 선임자들에게 명령 받았다. 1945년 이전에 많은 중국인들을 강간하고 살해했던 일본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 퇴역군인들 중 그 누구도 전쟁기에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미군과 남한 병사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드러난 뒤에도 퇴역군인들은 숨겨진 이야기를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반공주의의 유산과 평화에 대한 낮은 대중적 자각이 아마도 그들이 증언하려 나오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젊은이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비록 남한의 젊은이들은 유대인 대학살이나 캄보디아 학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대량 학살이 한국전쟁 이전과 한국전쟁기에 발생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말했듯이 어느 미국 매체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9년에 한국 대통령 김대중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국민들이 4.3 사건을 기억하도록 보도 하지 않았다. 어떤 한국 언론도 한국인들에게 그의 생각 없는 제주도 방문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았다. 4.3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는 보통의 한국인들은 제주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건이나 그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낼 수 없다. 이 일화는 보통의 한국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각의 현실을 보여준다.

C. 역사적 진실 규명에 있어 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국제적 충돌

한국전쟁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 운동은 2000년 무렵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 때 감히 그들의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러나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자 갈망하는 외부인들의 목소리가 희생자들이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외부인들이 과거사를 다루는 운동을 이끌었을 때 일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깨어있는 외부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전쟁기의 대량 학살과 같은 사안은 한국에서 들추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의 학자들과 깨어있는 피해자들은 다른 수많은 움츠러든 피해자들을 쉽게 운동의 시작 단계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생존자 가족들은 그들을 무고하게 희생자로 만든 쓰디 쓴 기억 때문에 공동 행동할 것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전쟁기에 가족구성원이 죽임을 당한 주 원인이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다른 관련된 정치활동을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단체나 집단 행동과 관련된 기회들을 몹시도 혐오한다. 그들은 집단 행동에 참여할 경우, 철저히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투옥되었던 전국피학살유족회 간부들과 같이 미래에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정권의 붕괴 이후 분출했던 희생자들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던 부정적인 집단내의 기억이 그들 스스로를 독자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희생자들

의 아내와 남편들의 나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전 1세대들은 이미 2000년에는 죽었기 때문이다.

어떤 희생자 집단이 만나서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줄 것을 탄원하면 그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한다. 핵심은 스스로 자신과 희생당한 부모가 ‘순수하게 결백한 시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한국전쟁기에 부모들이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죽은 집단의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리라는 것이다. 전자는 그들이 만일 ‘공산군 동조자’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희생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설득력이 심각하게 공격받거나 약해질 것이라고 여긴다. 남한의 현 반공 정권이 단지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사람만 충성스러운 시민의 범주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은 그런 환경 하에서 온전한 시민의 자격을 누리고 싶어한다. 지배체제가 그들을 연좌제에 의거하여 잠재적인 적으로 낙인 찍는 한 희생자 가족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결백과 정치적 순수성을 보여주길 열망한다. 이것이 그들이 대개 그들의 부모를 죽인 편에 서있는 보수적인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해진 트라우마와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경력이 확실치 않은 다른 희생자들에게 가담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뿌리 박혀있는 ‘순수한 선량한 시민’이라는 말은 그들이 강력한 국민적 기구로 연합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지 못하도록 해왔다. 전국유족회는 공식적으로 2000년에 설립됐지만 외부 인사의 리더쉽과 물질적인 후원 없이 자생할 수는 없었다. 희생자들 스스로가 그들 내부의 ‘순수한 시민’이라는 논점을 둘러싼 마찰을 해결해 나갈 수 없었다. 이 이탈과 분열은 그들이 ‘기본법’ 제정에 있어 피해자들의 종합적인 요구를 만들어낼 수 없게 했다. 오랜 힘든 반공 정권하에 야기된 피해자들의 무기력과 무방비 역시 과거를 다루는 문제를 현재의 사회 문제들의 훨씬 뒤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5. 과거청산 운동과정의 몇 가지 쟁점 - 2005년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1) 역사적 진실규명의 모델과 전략

역사적으로 과거 청산의 모델과 두 개가 있다. 뉘른베르크(Nuremberg) 재판처럼 승자가 패자를 처벌하는 것과 남아프리카처럼 진실과 화해를 향한 것이다. 의문사위원회(2000-2004)는 그 활동내용을 통해 볼 때 남아프리카 모델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두 개의 한국이 전쟁을 치렀을 당시, 한국전쟁은 정치적인 면에서 극도로 복잡한 전쟁이었고, 그 와중에 벌어진 학살은 이미 오래 전에 발생했으며,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쟁을 야기했다. 시작 무렵에 진상규명 운동의 지도자들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처벌보다는 진실규명,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역사 바로잡기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 바람직하다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의 배경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반적인 관점은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법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운동가들이 처벌의 문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압력이 없이는 진실규명을 위한 재향군인이나 전직 경찰과 같은 가해자들의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만일 학살의 가해자들을 확정해내지 못하고 처벌 가능성을 없앤다면 우리는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사과나 화해와 같은 역사적 진실규명의 다음 단계를 향한 길을 만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다수의 운동가들은 위험해 보이는 처벌의 문제를 건너뛰었다. 즉 소수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처벌은 과거청산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 법률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를 다루는데 있어서 진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진실은 치유와 처벌 양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기록과 다르거나 정 반대인 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진실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웅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진실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진실은 지배체제의 기원이나 지배층의 정당성의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진실은 ‘사회적 처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은 진실규명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처벌’을 남한 사회의 분위기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판단 역시 처벌의 문제가 정치 집단 구성원간의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배상의 문제 또한 역사적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 민감한 화두이다. 배상적 정의는 남한 정부가 1980년 광주 5.18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했을 때 한번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랬듯이, 희생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경우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하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지배적인 정치 권력은 진실규명을 중단하는데 동의 할 것을 대가로 하는 배상 및 보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198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1980 광주 학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있던 노태우는국가적화해의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광주피해자보상 법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보상 과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체제 불만 인사를 포섭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을 목적으로 권력층에 의해 과거청산 작업이 수행될 경우, 역사적 진실규명의 과업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남한 국민들이 광주 사건의 과거사 처리 과정을 보았을 때, 이런 정부차원의 보상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상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결국 보상액수와 관련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운동가들과 학자들은 보상이라는 논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실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개인에 대한 보상이 진실규명 이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다른 사회보장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상이 피해자들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든지 간에, 보상이라는 것은 정의와 돈을 목적으로 한 위로를 교환하는 등, 몇 가지 딜레마를 수반한다.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는 각 단체의 동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 주체가 주목하는 내용이 나 우려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거나 혹은 양립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운동가들은 ‘진실’을 제일 앞에 두고 자 하며 생존자 가족들은 그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러나 일부 희생자들은 보상 행위를 다르게 이해했다. 비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정부의 사과에 대한 표시라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그들이 희생된 것에 대한 첫 공식적인 인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징적인 배상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 비인간적인 처우, 그리고 연좌제를 넘어 온전한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한국전쟁기의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일부 유족들은 여전히 한국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거창과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회에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탄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역사적 진실규명을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위험성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적인 역사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보수세력뿐 아니라 진보세력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의심했다.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의 정책을 현재의 긴급한 사안들을 무시한 채 과거 지향적이고 퇴행적이라고 하여 비난했다. 일부 진보 학자들 역시 과거청산이 최우선 과제인지에 의문을 던졌다. 그들 모두 이런 의지 하에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기구로 간주했다. 작업을 이렇듯 정치화하는데 있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이후 제출할 성과나 권고는 현정권에 의해 의도된 것이고 역사적, 사회적 합의도 무시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이런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과 직면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랜 과거청산 운동이 제도화된 기관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심은 이 과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혹은 퇴행적인 정치적 동기로 인한 사업이 될 것인가 이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청산 없이는 우리가 만들 미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그 사업이 동기도 없으며, 분열을 조장하고, 충돌을 야기하여, 과거지향적이라고 그 논리에 반대한다. 이 과업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이 진실규명 이후 성공적으로 과거사를 다루기 위해 공공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회복과 보상을 향한 진실규명, 처벌, 그리고 명예 회복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국가로 향한 움직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국가 주도의 공공 교육의 과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경향이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과정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딜레마는 과거사를 다루는 것이 정치권력의 지원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의 여러 진실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치화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거부했을 경우 진실을 조사하기 위한 사법적 권한이 결여되어있다. 정부의 특별기구로서의 진실위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과거사 처리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권고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기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사 처리 사업이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치적 의지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5. 결론

과거는 명백하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은 여전히 현재의 정치, 법률, 제도, 그리고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일 과거의 잘못과 국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도 여전히 권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아있다면 그 잘못들을 어떻게든 바로잡아 진정한 법과 정의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기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만이 한국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한국전쟁기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리 세대에 남긴 의미 있는 교훈은 어떻게 내전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만일 국민들이 과거의 학살에 관해 새로 드러난 진실을 접함으로써 전쟁에서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평화 지향적이 될 것이며 인권의 가치에 민감해질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사회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역사적 진실 규명의 목적일 것이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가 인간의 존엄을 빼앗겨왔던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일부 시민들이 국가기관이 저지른 잘못의 피해자라는 감정을 가진 채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척과 무관심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가 공공 양심이라는 영역으로 스며들게 되면, 피해자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정책 책들이 시민사회 전반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과거사 처리 사업은 국가를 국민의 분노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신뢰 사회에서 고신뢰 사회로 바꿀 것이다.

n 참고 문헌

- Chalk, Frank, and Kurt Jonassohn.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Genocide: Analyses and Case Stud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Charles J. Hanley, San-Hun Choe and Martha Mendoza, *The Bridge at No Gun Ri*.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Department of the Army Inspector General, *No Gun Ri Review*, January 2001
- Johnson, Chalmers.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1.

Hirsch, Herbert.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Kim, Dong-Choon "Forgotten war, forgotten massacres— The Korean War as Licensed Mass Killing", *The Journal of Genocide Studies*, (2004), 6(4), 2004. 12.

Kuper, Leo.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McCormack, Gavan. C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1983.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 어떻게 처리됐나" 『역사비평』, 1990년 여름

Semelin, Jacques. "In Consideration of Massacre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3, no. 3 (2001): 377-389.

Semelin, Jacques. "From Massacre to the Genocidal Proces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002): 174.

Schrecker, Ellen. "McCarthyism and the Korean War," in David McCann and Barry S. Strauss, eds., *War and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War and Peloponnesian War*. New York: M.E. Sharpe, 2001.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미국인들에게 그 전쟁의 실제와 의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연대기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적으로는 신념의 전쟁이자 제국주의의 전쟁이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그랬듯이 지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처럼 비난으로 고통 받지도 않았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전을 "치안 활동"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을 치안 활동이라고 명명함에 따라 한국전쟁의 잔혹한 면이 쉽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미국 병력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이 쉽게 정당화 되었다. 한국 전쟁의 정말로 "잊혀진" 측면은 이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AP는 세계를 경악시킨 50년 전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들은 한국 전쟁에서 사로잡힌 피난민들이 미군에 의해 총격 및 기총사격 당했다고 선언했다. AP 기자들의 책, 헨리(Charles J. Hanley), 최상훈, 멘도사(Martha Mendoza) 저, 『노근리 다리: 한국 전쟁의 숨겨진 학살, Henly Holte co. 2001.』 BBC 역시 다음을 보도했다.

http://www.bbc.co.uk/history/worldwars/coldwar/korea_usa_01.shtml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461355.stm>

Kim, Dong-Choon "Forgotten war, forgotten massacres— The Korean War as Licensed Mass Killing", *The Journal of Genocide Studies*, (2004), 6(4), 2004. 12.

1960년 4.19 학생혁명 직후 대구와 부산에서는 한 움직임이 발생했다. 그것은 한국전쟁 기간에 학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조직한 것이었다. 그 움직임의 일부 지도층은 19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빨갱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http://www.facinghistory.org/campus/reslib.nsf/all/C8DA494906B70997852572650062FF78?Opendocument>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1948년에 제주도에서는 수백명의 빨치산 병력들이 국가의 분단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총선을 거부하며 산악지역에서 활동했다. 미군에 의해 지원받은 남한의 군대와 경찰은 그 반체제 게릴라들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갔다. 그러나 15만 명의 거주민들 중 3만 명이 게릴라들에게 부역한

죄로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에서의 학살의 전조임을 의미했다. 1996년에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18,000명의 신청인들이 무고한 희생자임을 명기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가 4년 후의 조사에서 발표되었다. 2005년에 남한의 대통령 노무현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951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군 11사단이 경상남도 산악지역의 잔존 게릴라들과 정부군을 일소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을 때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포함한 700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게릴라들에 부역함 혐의로 작전 중 죽임을 당했다. 비록 이 거창 사건이 병산의 일각일지라도 그 중요한 시점에 증거 없이 자행된 수많은 학살들 중 공식적으로 알려진 특이한 사례이다. 김동춘 op.cit.

제주 4.3사건은 수만 명의 섬 주민들이 게릴라와 정부군의 충돌로 인해 살해당한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이다. 남로당 제주 지부는 분단된 정권의 수립을 야기하는 총선 실시에 항의하여 미군의 지원을 받는 우익 정부에 반대하는 반란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라산으로 쫓겨 들어갔다. 좌익과 게릴라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의 3만 명의 민간인들이 서북청년단, 국방경비대 및 경찰에 의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건이 미군정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인의 죽음을 야기한 이 진압작전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Summary of the Report’s conclusion”, /english/sub05.html

Department of the Army Inspector General, NoGunRiReview, January 2001

사이트를 참조. 이 단체의 공동 창립자들은 학자들, 운동가들, 그리고 몇몇의 변호사들이다.

1960년에 있었던 그들의 과거 행적의 악마 같은 기억과 뒤이은 5.16 군사 엘리트들 이끈 박정희에 의한 탄압이 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1960년 한국정부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1948년 집권 이후 탄압해왔던 거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들을 촉진했다. 한국전쟁 피해자 전국연합은 그 때 나타났으며 그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묻는 시위를 벌였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는 그 단체의 지도층을 좌익이라 하여 구속했으며 그들의 활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 사건 이후 더 이상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전국적인 단체는 다시 나타나지 못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군에 의한 학살 뿐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학살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하여 그 조항을 법안에 넣는데 동의했다.

를 볼 것.

예를 들면, 한 사회학자는 한국전쟁이 통일 전쟁이었다고 주장하여 기소 당했다. 1950년 김일성의 공격은 남한을 사회주의 정권하에 두고자 하는, 그리고 그의 척도에서는 민족 통일을 의미하는 민족 해방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동기였다. 민족 통일에 대한 담론은 ‘빅3’ 및 공공 안전 수행원의 눈에는 한국전쟁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됐다.

노근리 사건에서 이 두 정부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미군 병사들의 증언을 무시한 채 그 사건이 ‘불명확한 전투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미국과 차이가 없다.

최근에 ‘평화재향군인회’라고 명명한 단체가 현존하는 공식 재향군인 협회는 많은 재향군인들의 진정한 의견과 이익

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등장했다 (을 볼 것). 비영리기구로서 그 단체는 군 문화의 혁신과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증진시킬 것을 천명했다. 비록 힘이 여전히 약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같은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그 단체의 등장은 정치 사회의 거대한 변혁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Chalmers Johnson,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Owl Books, 2000, p100.

1960년, 가해자들과 희생자들은 모두 20대와 30대였을 때 희생자들은 공개적으로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흘러간 40년이라는 시간은 희생자들에게서 가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빼앗아간 듯 하다.

거창 사건의 희생자들은 그들이 모든 선거에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투표행위의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보수 지배 집단이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이다.

남한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극우주의자들이 남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이 정상회담 이전에 남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이 수백만의 한국국민들을 죽인 전쟁범죄자라고 말한다.

칠레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도덕적 배상'이 군정기에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